개편엔 '공감' 추진방식엔 '이견'

■지방행정 개편 지방순회 첫 공청회

"기준·원칙 없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25일 첫 권역별 지방순회 공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 추진방식이나 통합기준,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광남 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부권 공청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은 정확한 장기발전계획이나 기준도 원칙도 없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의해 부랴부랴 진행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국민적 합의와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각 당이 통합구상을 내고 국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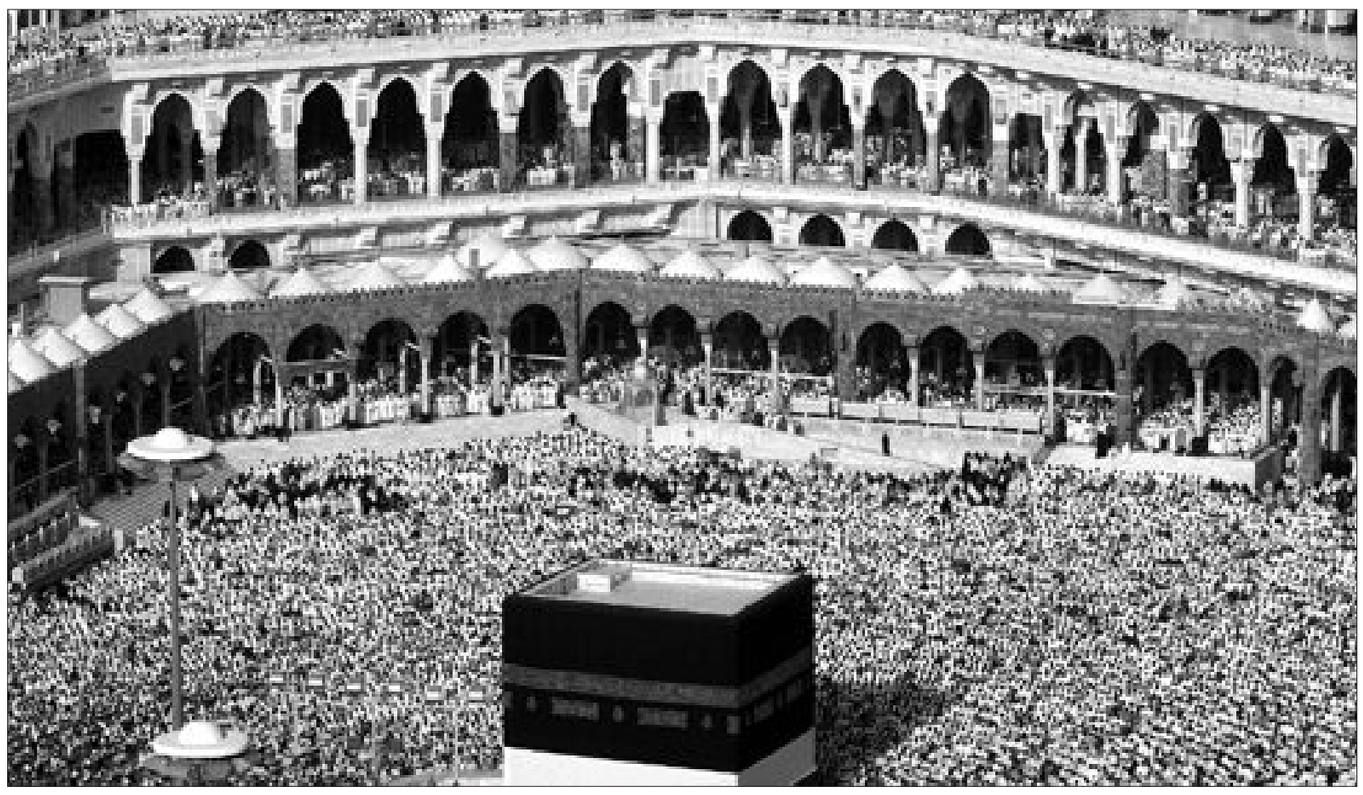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광역과 기초 2계층은 유지돼야 하며 일본의 경우 기초단체의 적정규모는 인구가 12만명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며 "환경·교통·문화·지역개발은 광역에서 하고 기초는 지역주민 생활자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지자체 기능배분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차등 분권이 돼야 하며 일본처럼 지정시, 특례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또 구역개편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은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개편 추진위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철수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행정구역 통합은 강제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며 "또 재정력이 낮은 군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시군 재정자립도의 등급을 나누고 인접 시군구 통합 때 서로 다른 등급이 묶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24일(현지시간) 이슬람권 연중 최대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가 시작된 가운데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정동채 前 장관 내년 광주시장 공식 출마선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중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정치인은 정 전 장관이 처음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확실히 출마하겠다"며 "내년 2월2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명함 돌리고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광주시장이 되면 광주를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인 창조적 문화경제도시로 만들겠다"며 "뉴욕과 파리 같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공장도 오고 사람도 온다"고 강조했다.

또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민노당과 역할을 혼동해선 안되며, 과거 구좌파식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실사구시로 임해야 한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놔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전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중도실용 노선을 강조했다.

송영길 28일 전남대서 '자서전' 팬 사인회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본관 1층 컨벤션홀에서 자서전('벽을 문으로'-송영길, 새로운 도전과 비전) 출간에 따른 저자와 대화 및 팬 사인회를 연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송 최고위원은 그의 책에서 "고 김대중(DJ),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하거나 두 시대를 무조건 미화하는 것만으로 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며 "냉정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확대"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5일 "전복양식 어업인의 숙원인 전복양식장의 면허면적당 시설기준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공급하는 전복양식은 생선 및 사료를 공급하는 어류 가두리 양식보다 오염부하량이 적음에도 불구, 전복양식장의 면허면적당 시설기준은 그동안 어류 가두리의 시설기준인 20%보다 적은 10%였다"며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 농식품부가 빠르면 12월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조치로 인해 전복 양식어업인의 생산량 증가율이 43%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 등 전남 서남해안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OECD 13년만에 '원조 선진국클럽' 가입

한국이 25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에크하르트 도이처 DAC 의장 주재로 DAC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회원국과 우리 대표단의 질의응답과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한국의 DAC 가입을 공식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중수 주OECD 대사 명의의 DAC 회원국 초청 수락서한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 가입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이 됐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실직·휴폐업…광주 '위기 가정' 급증

생계·의료 등 긴급지원제도 이용 전년비 3~4배 늘어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실직· 휴폐업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말까지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해 모두 6천677가구, 1만5천757명에게 생계지원금 6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16가구, 3천346명에 비해 3배~4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원금 규모도 전년 27억원에서 2.4배 증가했다.

유형별 긴급지원제도 수혜자는 생계 및 의료지원이 6천112가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생계비 지원가구는 4천920, 의료비는 1천920가구였다. 또 주거비 지원 31가구, 학비지원, 시설입소 등 기타 지원은 534가구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가정 대부분이 가장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난에 봉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또 정부가 위기가정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크게 확대한 때문에 이처럼 위기가정이 늘어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5개 구청과 함께 위기가정 발굴사업을 펼쳐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추진실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긴급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한 경우 ▲주 소득자가 가정 폭력으로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이런 가운데 한시생계 보호제도 수혜가정도 줄지 않는 등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11월 현재 1만6천11가구를 한시생계보호제도 수혜 가정으로 선정, 모두 118억원을 지원했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정부가 경제난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1 광주 환경엑스포 축소될 듯

정부 지원 부정적…국제포럼·녹색박람회로 가닥

광주시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1 광주 세계환경엑스포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광주시의 환경엑스포 개최 시기와 맞물려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정원박람회 등 엑스포가 잇따라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행사 개최를 지양해줄 것을 시에 권고했다.

시는 정부가 행사지원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2011년 10월, 8일가량의 일정으로 국제포럼과 녹색성장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국제포럼은 광주와 제주도 서귀포시 등 45개국 108개 도시가 가입해 있는 국제환경협약도시 회의 형태이고, 녹색성장박람회는 친환경상품전시회란 이름으로 매년 열리던 행사로 올해는 경기 고양시에서 열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